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오늘 투표소 투표 국민의당 25일 광주·전남·제주 현장투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250곳의 구·시·군 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해 투표소 투표를 신청한 경선 인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역 투표 장소는 광주의 경우 5곳·전남 22곳으로 시·군·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에 설치돼 있다. 투표소 안내는 제19대대선 경선 위탁사무를 맡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1·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민주당은 모집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1998년 5월10일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콜센터·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을 접수받았다.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제주를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경선을 펼친다.

순회경선은 현장투표와 투표소 투표로 진행되며, 현장투표 합산 80%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순회경선 현장투표는 권역별로 만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탁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 광주·전남 19대 대통령후보자 경선 투표소

더불어민주당 (투표소 투표 22일)		국민의당 (현장 투표 25일)	
장소	시·군	장소	시·군
광주광역시			
제봉로 186 동구 선관위	동구	동구청 지하 1층 민방위훈련장	동구
상무공원로 138 서구 선관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서구
대남대로 326 남구 선관위	남구	남구청애인복지관 다목적강당	남구
용봉로 135 북구 선관위	북구	북구청 3층 대회의실	북구
무진대로 246 KT우산사옥 8층	광산구	목련초등학교(1학년 1반교실 1층)	광산구
광산구 선관위			
전라남도			
백년대로 265길 15 선관위	목포	유달경기장	목포
화산로 7 선관위	여수시	갑여수시민회관	여수
연자로 36	순천	순천대학교 실내체육관	순천
송월3길 33	나주	미도부패	나주
광양읍 성북길 35	광양	수협어업인 복지회관	광양
담양읍 지침6길 83	담양	담양 문화회관	담양
장성읍 역전로 120	장성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장성
곡성읍 낙동원로 35	곡성	군민회관	곡성
구례읍 봉성산길 5	구례	구례읍사무소	구례
고흥읍 고흥로 1568	고흥	고흥군민회관	고흥
보성읍 송재로 207	보성	보성실내체육관	보성
화순읍 대교로 19	화순	화순군민회관	화순
장흥읍 동교1길 13	장흥	장흥실내체육관	장흥
강진읍 목리길 10	강진	강진읍사무소	강진
완도읍 개포로 56번길 5-9	완도	완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완도
해남읍 교육청길 54-3	해남	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	해남
진도읍 교동5길 47	진도	진도 향토문화회관 지하연회장	진도
영암읍 오리정길 45	영암	군민회관	영암
무안읍 무안로 468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
영광읍 물무로 48	영광	영광읍 천년로 1464	영광
함평읍 인북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	함평	함평읍 한우프라자 3층	함평
압해읍합복복지회관 1층 회의실	신안	압해읍 종합복지관	신안

주당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자유한국당, 26~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관리·지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구·시·군 투표관리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해 각 정당에서 작성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선선거인이 전국 구·시·군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위탁관리·지원한다. 온라인투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투표나 문자투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리투표나 이중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연합뉴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방 의장은 전날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주최로 열린 ‘청렴 대한민국 부정부패 근절 전국 선포대회’에서 ‘자랑스런 청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렴코리아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선포대회를 열고 청렴 한국인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한국 문화의 특성적 부패와 관행은 연구주의, 온정주의를 뿌리로 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성과 의원의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함께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광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민주당 이재명

“호남경선 이겨 민주후보 될 것”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맨 오른쪽)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이 시장과 박지경(오른쪽 두번째)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후보자 집중 토론회를 하고 있다.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 정치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의 집중 토론회에서 자신감 넘치는 환한 표정을 보였다.

이 시장은 “호남지역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 외는 다르다”며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해 결국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내내 지방을 걱정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 공정사회 건설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불평등하고 그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 국가 전체로 보자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기회가 사라져서 미래와 꿈이 없는 사회가 됐다. 공정사회 건설의 첫 단계는 적폐청산이다. 지금 ‘선통합 후척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시대정신을 호도하는 것이다. 청산 없이 어떻게 통합이 되나. 적폐청산 없이 어떻게 공정국가가 가능하겠나.

- 공정사회 건설에 왜 ‘이재명’이 있어야 하는가.

▲ 사법연수원을 마치며 인생을 공정사회 건설, 억울한 사람 없는 사회 만들기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어릴 때 다니던 공장, 그 참혹한 삶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불평등하고 참혹한 현장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다.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이처럼 치열하게 살아와서 적폐청산에 최적화됐다.

- 개혁에 대한 입장은.

▲ 현재 상태로 개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적폐청산 없이 공정사회 불가능

다음 대통령 임기중 개혁 바람직

정책권한·재정 지방 분산해야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개혁하는 게 맞다.

- 개혁 방향은.

▲ 모두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현상태를 고착화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회가 최근에 무엇을 했다. 또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일 리더십이 유리하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 바로 레임덕이 시작되니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산해야 한다. 우선 국가 권력기관 간 수평적 분권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등 기본권 강화도 필요하다.

- 현재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대한민국 안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균형의 대원칙은 국익 중심, 자주 중심이다. 이명박정부에서조차 그 균형을 지키려 했는데, ‘박근혜’가 했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 지방분권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국토균형발전 대책은.

▲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달고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국토의 비효율적 사용과 지방도시 침체를 막을 길이 없다. 정책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에 맡겨놓으면 쉽고, 효과가 빠른 곳에 먼저 투자할 것이다.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

켜 줘야 한다. 각 지자체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결정을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다. 또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꼬리표를 붙여 준 돈이 49조. 매칭 펀드가 32조원, 이를 합쳐서 81조원이다. 이 81조원의 집행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

-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있나.

▲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민주당 내 경선과 동떨어져 있다. 경선에는 5000만명 중에 200만명 조금 넘게 참여한다. 유권자를 4000만명 집어다 5%밖에 안 된다. 국민 100명 중에 3명이 투표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그 3명이 누구겠나.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투표하는 사람이다. 여론조사는 될 것 같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선은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 내(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하지만,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 측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최소 1차전에 2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남경선에서 이겨서 1등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사실상 결판난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지금의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 이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는데.

▲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 거대한 세력의 지휘관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 된다. 문 전 대표는 세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안정감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철학의 일관성으로 봐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jkpark@

